김치축제 '신종플루 잡는 축제'로

저병원 인플루엔자 억제 등 김치 효능 연구논문 발표

개막 한달 앞…전시·홍보 등 행사 준비 돌입

신종플루 확산으로 취소 됐다가 다시 열기로 한 광주 김치문화축제가 '신종플루 잡는 축제'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22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16회 광주 김치문화축제'(10월23일~11월1일)가 저병원 인플루엔자 억제 등 김치 효능을 알리는 건강음식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막행사와 전시, 홍보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개막식에 참석할 주한 외국사절과 해외 자매, 우호 도시 관계자, 다문화가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한 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단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대상으로 '남도 묵은지 경연'과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치산업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또 '김치 명인 콘테스트'는 기존의 지역 경연 방식을 탈피해 전국을 대상으로 경연을 벌임으로써 음식축제 중 유일하게 주어지는 대통령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숨어 있는 김치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김치 스토리텔링'에는 230여편이 응모해 김치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김치 담그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가 하면, 김치의 학술적 가치를 논의하는 국제 김치 학술심포지엄을 열기로 해 깊이를 더했다.

특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김영진 박사가 '김치의 저병원 인플루엔자 억제 효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심포지엄에는 미국, 스페인, 호주 등 김치연구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종플루에 대비하기 위해 각 기관과 단체 등과 협조해 안전한 축제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6회 광주김치문화축제는 10월23일부터 11월1일까지 10일간 광주 염주체육관과 광주 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를 해양레포츠복합단지로 개발해야"

'남해안선벨트 정책 연계방안 토론회' 주장

광양만권 통합, 중앙정부 집중 지원받아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여수와 인근 지역을 해양레포츠복합단지나 해양의료관광복합리조트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해양 마리나 산업의 진흥과 남해안선벨트 정책의 연계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한기준 과장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해양마리나의 발전 방안'이란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과장은 우선 여수 인근 지역의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을 통합 내걸었다. 지난해 71만명이지만 025년 100만 인구가 되는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 중앙 정부의 정책적·특혜적 집중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과장은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개발 대안의 하나로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마리나, 해양스포츠단지가 결합한 '해양레포츠복합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여수박람회지구로 지정, 민간자본 유치 및 해양레포츠 관련 산업을 유치해야 하며 요트나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관련 특수선박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종합 마리나시설과 해양스포츠종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또 두 번째 개발 대안으로 해양관광지구, 마리나, 의료관광지구가 결합한 해양의료관광복합리조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화한 기후와 해양자원을 이용, 의료시설·건강·미용시설·보양·휴양시설·실버시설 등이 집적된 웰빙헬스케어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무원노조 정치 활동 방치 않겠다"

임태희 "복수노조 허용 등 예정대로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논란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밝힌 뒤 "민노총이 사실상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한승수 총리도 그런 걱정에서 미리 말(경고)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유예돼온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이제 시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 등을 감안할 때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지급에는 "기본원리에 맞지 않고, 노조도 자체 재정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때 그 기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 조건에 맞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은 경제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로계약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방의원 사법처리 '수두룩'

광주, 광역 4명 기초 5명…전남은 기초만 17명

선거법 위반·알선 수재 등 혐의 '자질론' 시비

지난 3년간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중 2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3년간 비리행위로 전국에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38명의 9.6%가,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가 사법처리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사기·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집계돼 '의원 자질론'시비가 일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5명, 전남에서는 기초의원만 17명이 각각 사법처리됐다.

혐의별로는 광주의 경우 선거법 위반이 6명, 알선수재 1명, 뇌물 1명, 도로교통법 1명 등이다. 전남의 경우 선거법 위반이 7명, 도로교통법 5명, 뇌물 1명, 사기 1명, 상해 1명, 기타 2명 등이다.

타시도의 경우 서울의 경우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 처벌됐고,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가 24명, 경북 22명, 경남 19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난 1949년의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중국의 업적을 보여주는 베이징의 한 전시관 입구에서 한 여성이 2009년 9월 22일 (좌로 부터) 마오쩌뚱),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중국 공산지도자들의 초상화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기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촌 '온실가스 감축' 머리 맞댄다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막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가 22일 오전 9시(한국 시각 밤 10시)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개막됐다.

오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15)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급만 100여명, 장관급까지 합하면 18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 정상들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등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날카롭게 맞서온 주요 이해 관계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와 함께 8개 원탁회의 중 하나를 주재하면서 선진·개도국간 중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중국은 '準계엄상태'

국경절 앞두고 北京서만 6,500명 체포

중국 베이징 공안당국이 오는 10월 1일 거행되는 건국 60주년 기념식(국경절)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50여일 동안 치안확보 차원에서 검거한 각종 범죄 피의자가 무려 6천5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국경절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범죄소탕 작전을 벌여 폭력조직 360여개를 일소하고 9천800여건의 각종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6천5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검거된 범죄피의자들은 납치범, 조직폭력배, 강도, 절도, 차량 위조자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죄 피의자 검거 건수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당시 때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중국 지도부가 이번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소요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검거된 범죄 피의자는 4천144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中 언론 '그랜드 바겐'에 관심

한반도 정세 화해분위기 평가

중국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서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주최한 오찬에서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했고 관련 기사는 포털사이트들에도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주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대화 의지를 확인한 것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